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사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사(1교시) 시험 과목 : 형법(07), 해사법규(09)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②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
 - ④ 개정 「형법」의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이 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甲이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다른 외국인 선원의 지갑을 훔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3.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 ③ 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 ④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4.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의 불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 ②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 해당되며,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5. 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6.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익사 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④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7. 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8.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만 한다.
 - ②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③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산물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냉동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③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나,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 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 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11.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음란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
 -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12.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면서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빙성이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3. 다음 중 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15. 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 甲이 A를 기망하여 A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한 경우 이체받은 돈의 인출행위
 - ② 피고인 甲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 ③ 피고인 甲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 ④ 피고인 甲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다른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

16.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② 甲과 乙이 서로 살인의 공모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상 각각의 과실만으로는 교량의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17.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②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 ③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18.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 ②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②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 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 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1.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2. 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간치상죄 기수
- ②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 - 체포죄의 미수범 인정
-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지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경우 - 절도죄의 미수범 부정
- ④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사기죄의 불능미수범 인정

23.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이익,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며,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25.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6.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 종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경찰서 보안과장 甲이 乙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27. 다음 중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② 중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8. 다음 중 상해와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였더라도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고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0. 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④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31. 다음 중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주점 도우미인 A와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A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A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A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행위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상속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

32. 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신의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②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세 유아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혼인 외의 자(子)가 자신의 생모인 것을 알면서 그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②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있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4. 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 甲이 아내인 A의 물건을 훔친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에는 적용된다.

③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35. 다음 중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②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36.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④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37. 다음 중 손괴의 죄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이 소유자 乙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38. 다음 중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④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39. 다음 중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둘 다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 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 ②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 ③ 甲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를 하였다. - 甲은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④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여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40.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에 해당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③ 외관상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자는 고소 의사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해 사 법 규

1.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해수역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해산 명령 등을 하는 것이다.

④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거나 거짓 신고라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본부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예인하는 자는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통지할 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거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④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7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②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③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1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5.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어선(B선박)이 항행 중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동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선박에게만 B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② B선박에게만 A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상대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게 변침하여야 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하여야 한다.

6. 다음 <보기>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가),(나),(다)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가)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유선장에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한 유선(5톤 미만)이 90척일 때 (나) 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다) 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① 110 ② 115 ③ 120 ④ 125

7.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 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중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 이상
- ②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③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④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8.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함정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한국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 ④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9.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중략...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개월 이내

① 1 ② 3 ③ 5 ④ 7

10.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해외파병과 원조를 준비하며 부두에서 기름(선박연료유)을 받는 중 밸브조작 잘못으로 계속 기름이 넘쳐 경유 500리터가 바다로 흘러 가게 된 경우
-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④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11.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한다.
- ②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은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단,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12.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금지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②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어항 수역의 밖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13.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관리무역항은 울산항, 마산항, 장항항, 동해·묵호항 등 14개 항이다.
 - ② 지방관리무역항은 보령항, 제주항, 통영항 등 17개 항이다.
 - ③ 항만의 관제, 정보통신, 홍보, 보안에 관련된 시설은 기능시설에 해당한다.
 - ④ 2종 항만배후단지에 정보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14.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도선사가 도선의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시설의 형편상 효율적인 선석 배정을 위하여 입·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④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15.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15톤인 어선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출항할 수 있다.
 - ③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외국 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하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라 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추정되는 외국 어선에 대하여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에 동시에 저촉될 때, 「경제수역어업주권법」과 「수산업법」이 모두 적용된다.
 - ③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 ④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을 조타실의 앞뒤, 좌우 측면의 상단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17.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 조사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18.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 또는 증명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검수사업 ② 검정사업 ③ 검량사업 ④ 검인사업
19.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어선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할 수 있다.
 - ③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 질서 유지, 해양오염의 예방,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해양경찰관은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양경비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 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③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을/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의 ② 허가 ③ 승인 ④ 면허

2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사고”에는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②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25.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의 등화 또는 위쪽과 아래쪽에는 등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홀수제약선은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1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항망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0명 이상인 유·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선원 정원 등의 기준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은 30년 이하이다.

④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8.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을 등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어선에 대하여 발급해야 할 증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적증서

② 선박국적증서

③ 등록필증

④ 어선원부

29.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은 해원이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났을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한종류로 해당 해원을 상륙금지 시킬 수 있다. 상륙금지는 정박 중 10일 이내로 한다.
- ② 해원 수가 8명인 선박에서 선장이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최소 5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한다.
- ④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 해야한다.

30.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임대인에게 적용한다.
- ③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은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31.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면허어업
- ② 허가어업
- ③ 등록어업
- ④ 신고어업

32.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초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33.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해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4.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 발생 지점과 가까운 심판원의 관할에 속한다.
- ③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5.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조업자제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이 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36.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터업 허가에 대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낙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7.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한 사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8. 다음 <보기>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① 611 ② 613 ③ 511 ④ 513

39.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를 초과하여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허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을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0.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이 되는 자
- ②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